

## “정부 부처가 범죄행위를 못 본 척..”

### 신일정밀 부당노동행위 엄중 처벌 결의대회 ... “노동부 장관 책임 묻는 투쟁할 것”

“노동부 강릉지청은 왜 강원지방노동위원회가 판정한 신일정밀의 부당노동행위를 조사·처벌하지 않습니까. 중앙노동위원회는 현장에서 사측이 벌이는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당장 멈춰주십시오”

노조파괴 중단과 성실 교섭을 촉구하며 160일째 전면파업 중인 강릉의 금속노조 신일정밀지회 노동자들이 세종시 노동부-중앙노동위원회 앞에 모였다.

노조와 지회는 중노위 조정회의를 여는 3월 31일 ‘신일정밀 부당노동행위 엄중 처벌, 노조파괴 노무사 노동부 징계 촉구 금속노동자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대회에 노조 충남지부와 대전충북지부 조합원들이 함께하며 투쟁기금을 전달하는 등 신일정밀지회 조합원들에게 큰 힘을 주었다.

김동범 신일정밀지회 부지회장은 조정회의에 참석한 손재동 지회장을 대신해 대회 인사말을 전했다.

김동범 부지회장은 “가혹한 현장에서 다치지 않고, 죽지 않고 일



하기 위해 금속노조에 가입했다” 라면서 “사측은 지회를 만들자 위장폐업, 교섭 거부·해태, 불법 대체인력 채용, 불법 수당 지급, CCTV 감시, 가정통신문 발송 등 부당노동행위를 오늘도 저지르고 있다”라고 규탄했다.

김동범 부지회장은 “신일정밀과 사측이 고용한 이강훈 노무사가 저지른 불법 행위를 노동부 강릉지청이 눈 감고 있다”라며 “중노위는 강원 지노위가 인정한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다시 인정하라”라고 촉구했다. 지회는 노동부에 이강훈 노무사 징계도 요구하고 있다.

정원영 노조 사무처장은 대회사를 통해 노동부에 ▲사측 범죄행위 조사 위한 민성기 전무와 이강훈 노무사 휴대전화 등 압수수색 ▲노조파괴 주범 이강훈 노무사 자격 즉시 박탈 징계 ▲사측 불법행위 행정 처분 거부 강릉지청 업무감사 ▲민주당 주도 교섭창구 강제 단일화 폐기 등을 촉구했다.

정원영 사무처장은 “노동부가 우리의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2차 신일정밀지회 원정투쟁 때 오늘처럼 조용히 넘어가지 않겠다. 노동부 장관의 책임을 묻는 투쟁을 반드시 배치하겠다”라고 경고했다.

# “금속노동자가 대양판지와 끝장 본다”

## 노조 대전충북지부 민주노조사수 결의대회 ... “교섭창구 단일화 폐기 투쟁 전개”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와 대양판지 지회는 3월 26일 대양판지 청주공장에서 ‘민주노조 사수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열었다. 3월 26일은 대양판지 지회 설립 1주년 날이다.

대양판지 지회 조합원들은 1년 동안 불법 어용노조에 맞서 민주노조를 지켜왔다. 지회와 지부 조합원들은 4 노조까지 만들며 금속노조를 탄압하는 대양판지의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했다.

김훈 대전충북지부 대양판지 지회장은 투쟁사에서 사측의 불법에 맞서 도둑질당한 권리를 당당히 되찾겠다고 선언했다. 김훈 지회장은 “회사에 노조가 네 개나 된다. 검찰의 압수수색이 있었고, 회사가 범죄혐의자로 수사도 받았다. 국회 국정감사에 끌려 나왔다. 어용노조가 직권취소됐다”라고 보고했다.

김훈 지회장은 “회사는 여전히 죄의식이 전혀 없다. 오로지 금속노조만 막으면 된다는 식이다”라며 “불법노조 직권취소에 그치면 안 된다. 사측이 빼앗은 우리 권리를 온전히 원상회복해야 한다. 더는 빼앗기지 말자. 우리가 주인이다”라고 선언했다.

김정태 노조 대전충북지부장은 “사측이 친기업노조를 만들고 금속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 중심에 복수노조 교섭창구 강제 단일화 제도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정태 지부장은 “대양판지 사례를 보면 이 제도가 얼마나 단결권을 훼손하는지 알 수 있다. 지부는 교섭창구 강제 단일화 제도를 반드시 폐기하겠다는 의지로 투쟁할 것이다”라면서 “이 투쟁의 중심에 지부 확대 간부들이 서겠다. 투쟁하는 민주노조 조합원이라면 반드시 함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4월부터 대양판지 압박 투쟁 경고

김정태 지부장은 4월부터 대양판지의 만행을 전국에 알리는 투쟁을 전개한다고 경고했다.

양기창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대양판지 어용노조 노동부 직권취소는 대양판지 지회의 단결과 지부 동지들의 연대로 쟁취한 성과이다”라며 “단결과 연대의 역사를 만든 힘으로 반드시 승리하자”라고 독려했다.

대양판지는 2020년 3월 금속노조

설립을 감지하고 어용노조를 만들어 대응했다. 대양판지 청주공장 노동조합, 대양판지 주식회사 노동조합 등 두 개를 만들었다.

관리자들이 어용노조에 가입하라고 강요하고, 조합비도 회사가 대신 내주겠다고 했다. 회사는 복수노조 교섭창구 강제 단일화 제도를 악용해 대양판지 주식회사 노동조합을 교섭대표노조로 만들고, 신속하게 임금과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광주전남지부, 대양판지 두 지회는 1년 동안 어용노조 설립 취소 투쟁을 벌였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3월 4일 대양판지 주식회사 노동조합의 설립신청을 직권취소했다.

대양판지는 어용노조의 설립 자체가 무효는 아니라는 해괴망측한 궤변으로 어용노조와 맺은 단체협약을 유지한다며 금속노조와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 대양판지는 최근 몰래 4 노조를 만들었다.



# “한국지엠, 뭐 하는 짓거리냐”

## 한국지엠 창원부품물류센터 일방 폐쇄통보 ... 먹튀 철수 구조조정 사전 작업?

한국지엠 창원부품물류센터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한 금속노조 경남 지부 한국지엠창원부품물류비정규직 지회 조합원들이 3월 30일 한국지엠 창원공장 앞에 모였다.

한국지엠은 3월 26일 ‘창원PDC 통합 및 업무 종료 안내’ 공문을 통해 창원PDC(부품물류센터) 업무는 3월 31일부로 종료, 창원PDC를 세종PDC로 통합한다고 일방 통보했다.

해당 센터 노조 한국지엠지부 조합원들도 구조조정에 내몰렸다. 한국지엠지부 정비부품지회 박대금 대의원은 26일부터 지회 농성장에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지회는 “물류센터 일방 폐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라며 창원부

품물류센터 폐쇄가 글로벌 지엠의 이윤 극대화과 철수를 위한 사전단계라고 지적했다.

지회는 “한국지엠 부품물류의 연간 수익은 2~3천억 원 이상이다. 창원물류센터는 생산성과 품질면에서 글로벌지엠 최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최우수 사업장”이라며 “창원센터의 폐쇄는 부품물류를 외주화해 발생하는 수익을 한국지엠이 아닌 글로벌 지엠이 가져가려는 구조조정이다”라고 밝혔다.

지회는 “지엠이 한국 공장에 관한 폐쇄와 통합 등을 계획대로 시행하면 한국지엠의 수익성은 나빠지고 강도 높은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라며 “외투 자동차 3사들이 했던 것처럼 AS를 포함한

주변 사업을 모두 정리하고 생산조립공장만 남겨 향후 철수를 쉽게 하려는 정책이다”라고 비판했다.

한국지엠은 지난해 한국지엠지부와 교섭에서 ‘창원과 제주(부품물류센터 폐쇄) 일방 추진 않는다’는 약속 지킨다’라고 밝히고 특별교섭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약속했다. 한국지엠은 26일 공문을 통해 노동조합의 이해를 바란다면 폐쇄 사흘 전 일방 통보했다.

홍지욱 경남지부장은 “한국지엠은 고용유지 약속, 일방 폐쇄 추진 중단 약속을 어겼다. 뭐 하는 짓거리냐”며 지엠 자본에 강력한 대응 투쟁을 경고했다.

## 노동부, 살인기업 포스코 범죄 방조하나?

금속노조는 3월 31일 오전 노동부 포항지청 앞에서 ‘노동자 배제하는 안전보건진단, 포스코 눈치 보는 노동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보건진단 시 노동자 참여 보장을 요구했다.

노동부 포항지청은 3월 22일 포스코 포항제철소에 안전보건진단을 명령했다. 금속노조는 노동자와 노조 추천전문가가 참여를 요구했지만, 포항지청은 참여를 보장할 법률 근거가 없다면서 요구를 거부하고 안전보건진단을 하고 있다.

노동부 포항지청은 그동안 법과

노동부 내부규정을 이유로 노조의 노동자 참여 요구를 거부해왔다. 금속노조 확인 결과 노동자 참여가 불가하다는 법 조항은 없다.

금속노조는 “현장의 안전문제를 누구보다 잘 아는 노동자의 참여를 저지한 노동부 감독은 사망사고를 막을 수 없다고 여러 차례 경고했다”라며 “포스코가 원하는 대로 노동자 참여를 막는 사이 두 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라고 분노했다.

금속노조는 “많은 사업장에서

노동자와 노조 추천전문가가 참여하는 감독과 안전보건진단을 시행했다”라면서 “포항지청만 유독 노동자와 노조 추천전문가의 참여를 반대한다”라고 꼬집었다.

금속노조는 “노동부가 안전보건진단을 정기감독과 특별감독처럼 포스코 눈치 보며 허투루 진행하면 살인기업 포스코를 방조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힘들 것이다”라면서 “현장 노동의 주체인 노동자와 노조 추천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투명하게 안전보건진단을 시행하라”라고 촉구했다.